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

KDI 북방경제실은 2018년 10월 17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 복단대 방수옥 교수,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커위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남북중 3각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서울 삼청각

사회

이석(KDI)

초청 토론자

방수옥(중국 복단대학교 교수),
공커위(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번 북한경제리뷰협의회에서는 중국 상해 복단대학교의 방수옥 교수님과 상해국제문제연구소의 공커위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각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우선 두 분 선생님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이고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 대북한 정책, 그리고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들이 시진핑 정부 들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수옥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수옥: 우선 이번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시하신 첫 번째 문제에 있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안정·평화 및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냉전이 종식된 이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첫째, 실질적 냉전구도를 타파하고,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셋째, 남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주통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이념과 목표 하에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단계와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창해 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이 현재 진행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18년 이래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 실현을 위해 남북간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한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공동의 노력과 선순환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두고 역할론에 대해 해석상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한국 정부의 ‘운전자 역할’에 의해, 북한은 북한 자신의 변화에 의해 정세가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관련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협조와 노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작용이 더 컸다면 한반도 정세는 현 단계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시말해 한반도 문제와 미중관계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관계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다뤄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처음 종전선언이 언급되었을 때 3자 혹은 4자 등 중국의 참여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조금씩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보이니 이는 중국 내에서도 최근 몇 개월간 토론되었던 문제이다. 한국 측에서 명확히 할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를 풀어 갈 때 신중을 기하여 관련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석: 방수옥 교수님께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셨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이어서 공커위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리겠다.

공커위: 먼저 KDI에서 초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KDI를 경제문제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의의였다. 아마도 중국의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이유는 전반적인 배경에 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북핵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북한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북한문제’란 평화체제 구축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말하는 ‘핵심 이익’이란 영토와 주권,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의 신(新)이익이다. 대표적으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조어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규정한다. 그렇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의 핵사고 또는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많은 난민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유입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한반도 정책에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중관계의 변화와 북중관계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이래 3번이나 방중을 하였는데, 이는 지난 몇 년에 비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첫째, 반목대치의 각축을 결합하여 일방적 제재에서 다자협력으로 전환, 둘째, 쌍궤 병행과 기술적인 북핵문제 해결, 셋째, 남북균형과 ‘신형국제관계’ 발전, 넷째,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정충설계와 ‘마지노선 사고’로 대응, 다섯째, 역지사지의 자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딜레마 대체이다.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쌍궤병행’과 ‘쌍중단’이다. 남북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 중국은 남측과의 관계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당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이조차도 중국에는 어려운 점을 제공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였을 당시 그동안의 전통을 깬 행보로 북한 인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년도의 변화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남북한 화해와 북미관계 진전 및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방수옥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의 결과를 견인한 원인에 대해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문재인대통령 집권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 즉 한국의 노력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시행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서 일련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각국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석: 공커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KDI는 경제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다. 그러나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 정치, 외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경제를 연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조금 전 방수옥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다. 중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종전선언 등에 있어 중국의 참여 또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방수옥: 현재 한반도에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북핵·미사일문제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핵우산, 게다가 각국의 국내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 복잡한 실타래의 결정적 요인인 북한의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을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종전선언 참여자가 3자(남북미)이냐 아니면 4자(남북미중)이냐는 문제이다. 사실 중국은 북핵문제는 북미가 당사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중국은 상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핵문제의 기원이나 남북분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를 북미라고 뜻하는 것이지,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방관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종전선언 참여국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정전체제에 서명한 당사국이자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관련국으로서 종전선언 협상 과정과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적으로 보아도 향후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전선언의 참여자가 3자나 또는 4자나에 대한 논란 이후 중국 내에서 논쟁이 많이 나왔는데, 전자에 대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종전선언 문제가 사드문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드문제는 한중간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를 사용한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한국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양국관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국 내에서 깊이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일치를 본 후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채택할지라도 상호 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석: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3자 혹은 4자를 두고 북중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방수옥: 3자냐, 4자냐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쪽 에서 나온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한 얘기냐, 아니면 북한에서 한 얘기냐에 대해 설왕설래한다. 어떤 한국 분들은 북측에서 3자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3자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이야기이고 현재 북한은 중국의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2018년 북중관계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더 확실한 내막에 대해서는 학자의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 북한은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벗어나 한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이룬다는 두 트랙의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공커위: 종전선언에 대해 방수옥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층에서는 이미 어떤 합의를 본 것 같다.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제가 한국 측 인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은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전선언은 굉장히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의 3자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나, 서로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 간의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지 않으면서 3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셋째, 종전선언은 과도적 조치로서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 당시 10.4 선언에서 이미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당시 중국은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섯째, 올해 3월 핀란드 회의에서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꺼려했다는 설이 있다. 중국이 참여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모두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에 대해 중국은 환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은 법리적으로 정전체제를 끝내는 사항이기에 당시 정전선언의 체결 당사국인 북한, 중국, 유엔군이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법리적으로 볼 때 중국이 불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남북간 군사문제에 관련한 선언이나 합의는 중국과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을 경우 그 구속력이 약하다고 본다. 과거에도 이미 비핵화와 관련해 7.4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들이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한국의 국내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선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석: 종전선언 참여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대북제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다. 최근 미국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의 숨통을 틔웠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데,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 방수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방수옥: 다음으로 제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생각(중국어로는 “我以为”)이 곧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의 인지에는 많은 착각(錯覺)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국제관계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다’는 주장은 대북제재에 대한 관념의 차이와 중국에 대한 선입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엔의 제재결의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사실 제재문제를 두고 미중 간 사고(思考)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극한으로 내모는 것보다 유화정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은 2018년 이래 북한이

보여준 상당한 변화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에 맞게 유엔의 대북제재 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유지 또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까지 북한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아직 비핵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북한 측이 선행조치를 많이 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변화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한 대대적인 대북제재 수정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입장의 차이, 즉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며 설령 단계에 제재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나 기타 형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응조치를 통해 비핵화문제 해결에 보다 더 빠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당사자 간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하며 관련 국가 간, 그리고 유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석: 공커위 박사님께서는 대북제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커위: 중국은 대북제재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다시피 2016년과 2017년도의 북한 핵실험 이후로 10개 정도의 제재조치가 가중되었다. 과거 중국은 민생 관련 품목들에 대한 제재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품목들이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무기금수만 했었는데 이후에는 군민양용 제품들도 금지하였고 방직물, 해산물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의 노무수출도 안 되도록 제재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관련 시설들인 풍계리나 금정리를 폐쇄조치했으며, 미군 유해도 송환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및 북미대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변화에 맞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게 아니냐며 계속 압박을 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를 완화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중국은 유엔의 제재 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 다만, 완화되는 부분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구했던 제재들이다.

예를 들어 항공유나 금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지퍼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단추에 사용되는 금속들도 예전에는 모두 제재를 했었지만, 이에 대해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조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지금 한국이 남북한 철도 연결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제재 사항과 관련될 수 있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석: 두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북한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은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혹시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방수옥: 질문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셨는데 중국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는 지정학적 가치, 역사문제,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핵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실마리는 북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북미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해결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올해 들어 북미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견인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북미를 설득하고 상호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변화를 위해서는 인식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이 바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에 있지 않나 싶다. 최근 북한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참석했던 두만강포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북한 인사들 중 중국이 과거 30~40년을 통해 이룩한 발전을 북한은 10년이면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북한 전역의 발전은 아닐지라도, 특구 개발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북핵문제, 냉전구도 미(未)해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 개혁개방 당시의 중국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어느 나라도 안보를 수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란 대체로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핵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것은 안보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안보를 튼튼히 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그럼 반대로 북한의 안보는 무엇으로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아마 이해가 갈 것이다.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비슷했다. 북한이 지난해까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에 자신감을 갖고 오늘날의 변화를 피한 것인데, 과연 아무 조건 없이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는 우려였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다.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 없이 무작정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남북이다. 이번 남북 군사협의를 남북간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 자체가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자, 앞서서도 강조하였듯이 북미간의 관계 변화, 즉 미국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중에서도 중국의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각자는 옛 관념을 고수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을 고수했고, 한국은 북한을 보는 옛 시각 등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 정세를 잘 이용하여 상호 간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북한사람들의 친인척들이 많다.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하여 친인척 간의 왕래를 통해 변화하는 중국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식이라 하겠다. 제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동양식 친(親)화적인 인간관계와 문화를 저버리는 것보다 상호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도 꼭 핵을 통해 안보보장을 받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 경제를 원만히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관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석: 북한에 친척을 둔 동포들이 중국 동북지역이나 연길에 여전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방수옥: 그렇다.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북중간에는 변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맥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북제재로 인하여 변경무역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 지역은 한국 생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연변 등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북에서 온 분들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으나, 언젠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 내 갈등, 소위 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한 국내적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석: 중국 동포와 북한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공커위 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커위: 태극기를 볼 때마다 그 모양이 휴전선하고 꽤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이 남북한을 상징하는 것 같고 건곤감리 4괘가 꼭 4대 강국을 나타내는 것 같다. 즉,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 그리고 한국이 위로 자신의 형제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국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 태극과 팔괘를 보면 두 물고기가 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태극기는 마치 휴전선처럼 단절된 느낌을 준다.

한국은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이다. 국토 면적이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굉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한 특이한 입지를 갖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핵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국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미국과는 동맹국 관계이며 또한 많은 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과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도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갖고 있는 환경적 조건과 관계를 잘 활용하여 주변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여건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특히 현재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중관계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현재 동북아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정상외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관계 역시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발전해야 하는데, 신뢰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드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는 중국이 사드 관련 제재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반대로 중국에는 지금 같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제가 보내드린 개요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다. 제일 왼쪽 그림에는 동심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동심원은 모두 세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심원의 가운데에 북한과 미국이 있다. 그 중심을 한국과 중국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장 바깥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북한문제는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가장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 북핵문제나 북한문제, 혹은 남북문제가 미중관계의 하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에 변화가 생겼고 남북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의 방향이 변화하거나 또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석: 동심원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해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미중간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

공커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자 한다. 사실 중국은 미중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고 중국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 만일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한반도의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평화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이후 중국의 대한국 관계와 대북한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렇다면(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수옥: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등이 진행됨에 따라 동북아 국제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그 방정식을 풀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중관계의 복잡성인데, 한반도문제를 미중관계와 분리하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두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과연 단합된 남북이 향후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등이 그것이다. 중단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결국 미중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미중관계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더 큰 그림 속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기반으로 외교의 틀을 잡고 있다. 남북한과의 관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공커위: 어려운 질문이다. 중국의 남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중국의 대외 환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중미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역내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중국의 대북한, 대한국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현재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방법론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남북 연방제로 통일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통일이 될지 알 수 없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 여부이다. 통일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인가? 만약 주둔한다면 어느 지역까지 진출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압록강까지 진출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셋째, 통일된 한반도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될지, 또 어떠한 정책전략을 펼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완전히 미국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게 될지, 아니면 미중 간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중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렇듯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석: 그렇다면,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진전될

경우 한국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협력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방수옥: 남북중은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치·안보 등 비경제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힘들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국면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발생했던 우발적 충돌들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 큰 장애가 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평화적 분위기를 얼마나 유지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향후 북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정립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 과정 중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는 주변국들 하기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미중 등 기타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한반도 및 역내 안보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이 있다.

경제분야에서 3자의 협력공간은 더 넓다고 본다. 그 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요건과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서로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남북, 한중, 북중, 러시아, 일본,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경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실제 협력의 환경이 조성되면 3국 간 내지는 이 지역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은 단절되어 있고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중 3자 간의 교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의 진전, 대북제재 완화(내지는 해지) 등이 진행되어 안정과 평화가 정착된다면 3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지역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이 현실화되면 일대일로와 자연스럽게 접목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 협력은 북한노동자들의 우수성과 자연자원 및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의 지혜이고 힘이라 할 수 있겠다. 굴곡진 길을 넘어 보다 아름다운 장을 후세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국가 간의 관계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공커위: 남북중 3각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남북중 3각협력보다는 북중러 협력이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북중러 3자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재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큰 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현재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과거 냉전시대에 북중러와 한미일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과거 양상의 재현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에 관해 전망하자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과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연계라든지, 창지투개발계획과 두만강 협력, 또 환황해 협력 등 협력 가능성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한중간의 협력은 굉장히 긍정적이며 그 잠재력도 크다고 여긴다.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의 일대일로나 과거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지금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 보면, 모두 탑다운(Top-Down) 방식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구도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성(省)별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산둥성은 한국의 서해안이라든지 김포나 인천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연변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나선지구나 북극항로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압록강 변의 단동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에서의 협력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프라 건설인데, 인프라 건설은 투자규모는 크지만 수익을 얻기가 어렵고 회수하는 것도 아주 느리다. 물론 중국은 많은 대형 국영기업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익이 돌아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데 정말로 투자 의향이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투자를 놓고 중국과 경협(경쟁과 협력)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의 광물 자원, 삼림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이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국과 협력을 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중국 측이 북한자원을 다 가져간다고 비난을 할 것이고, 북한이 한국과의 협력을 결정하게 되면 중국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협력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제재 해제는 없다고 이미 표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라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사실 남북간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은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0.4 선언만 보더라도 남북한의 경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이행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9월 평양선언에서 언급되었던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다만 연결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협력에서 이행부분은 남북중 3각협력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석: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를 모시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중 3각협력 가능성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